

# 고봉순과 마봉춘

## 공영방송을 지키는 길에서 다시 만나다!

MBC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지난 8일, 방문진 이사회장에 참석했던 엄기영 사장이 “MBC를 지켜 달라”라는 말을 남기고 ‘강제사퇴’를 당한 뒤 언론노조 MBC본부는 사실상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한



MBC본부 조합원은 이를 일컬어 “작두 위에 올라섰다”는 말로 지금의 상황을 표현할 정도로 퇴로 없는 외길싸움을 시작한 것이다.

차기 사장 선임을 오는 26일 모두 마무리하겠다고 ‘방송장악 청부업자’를 자임한 김우룡 방문진 이사장의 공언에 맞서 MBC본부는 총파업을 선택했다.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낙하산 사장 저지와 MBC사수를 위한 총파업 찬반 투표’는 투표율 96.7%, 찬성률 75.9%로 가결됐다. MBC본부는 또 26일 전국 MBC본부 조합원들이 총집결하는 비상 결의대회를 열기로 하고,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100인 결사대까지 구성했다. 결전이 임박한 것이다.

### 2년 전부터 가동된 MB氏의 MBC 장악 시나리오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 강박증은 이미 2년 전 KBS 8월 사태에서 똑똑히 확인한 바 있다. 감사원, 국세청 그리고 검찰 등 ‘충견’을 동원해 KBS를 포위, 압박한 뒤 자신이 임명한 이사들을 ‘행동대’로 앞세워 이사천리로 정연주 사장을 해임하고, 이병순, 김인규 낙하산 사장을 연거푸 투하했다. 이 과정에서 수백명의 경찰력을 KBS 본관 3층까지 난입시켜 군화발로 유린했을 정도로 무도한 정권이었다.

KBS의 8월 사태 직후, 청와대와 한나라당 주변에서는 ‘이제 남은 것은 MBC’라는 말이 공공연히 흘러나왔다. 시나리오도 상당히 구체적이었다. “방문진 장악⇒MBC 경영진 교체⇒PD수첩 등 비판적 시사프로그램 폐지⇒민영화”까지... 단계별 장악시나리오가 현실화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 MBC 장악 행동대로 나선 ‘방문진 5적’

MBC본부가 공영방송 MBC 파괴 5적으로 지목한 김우룡, 김광동, 차기환, 최홍재, 남찬순 등 친이명박 이사들이 점령군처럼 MBC에 입성한 것은 지난해 7월 말이었다.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부터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PD수첩의 편파왜곡’을 문제 삼고, 회계연도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경영적자’를 이유로 엄기영 사장 등 경영진을 압박했다. 정권의 힘을 등에 업은 방문진 이사들의 행태는 2008년 정연주 사장 해임 당시 KBS 이사회에 그것과 하등 다를 것이 없었다.

그리고 6개월 뒤, 경영진 일괄 사표를 받아내고 보도,제작 본부장을 해임한 뒤 그 자리에 자신들이 낙점한 인물인 황희만, 윤혁씨를 앉혔다. 마지막 방문진 이사회장을 나서며 했던 엄기영 사장의 자족 섞인 한마디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잘 표현해준다. “도대체 뭘 하라는 건지...” 그리고 그는 MBC를 떠났다.

### MBC노조, 다시 최전선에서 서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총파업투표 가결 직후, 사장공모에 응한 15명 가운데 누가와도 ‘낙하산’이라고 규정했다. 실제로 응모자들의 면면은 친이명박 또는 친한나라당 일색이다. 심지어 이 가운데는 지난 대선 당시, KBS 특보사장과 한술밥을 먹던 이까지 눈에 띈다. 벌써부터 대통령과 같은 대학 출신인 구모씨와 김모씨의 2파전이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 아무튼 이 중 누군가는 26일, 집권 3년차 정권의 특명을

받고 낙하산을 등에 진 채 MBC 앞마당으로 내려오려 할 것이다. 그리고 비판적인 뉴스와 시사프로그램들을 없애고, 내부에서 저항하는 기자와 피디들을 인사를 통해 제거하고, 시민들과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호도하려 할 것이다. KBS의 낙하산 사장이 그랬듯 안으로는 굴욕감을, 밖으로는 좌절감을 안기려 할 것이다.

피할 수 없는 싸움은 시작됐다. 그 끝이 어디일 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치열한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MBC본부 이근행 위원장은 이 큰 싸움을 예감하듯, 지난 연말 KBS 새노조 특보(2호, 2009.12.29)에 이런 말을 남겼다.

“방송독립이라는 시대적 대의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KBS 모든 동지들도 하나가 될 것임을 믿기에, 닥쳐올 힘겨운 나날들에 함께 할 당신들이 있어 기쁘고 또 힘이 됩니다...그 길에서 ‘앞선 자’와 ‘뒀선 자’의 구별이라는 건 참으로 무의미합니다. 오로지 함께 함께 걸었다는 사실만이, 맞잡았던 손의 따스한 체온만이, 마침내 한 번 뿐인 삶의 의미로 남습니다. 당신이 희망입니다. -이근행(언론노조 MBC본부 위원장)”

고봉순이 마봉춘을 만나러 갑니다!

KBS 새노조, MBC 지키기 촛불 문화제 참가  
2월 26일(금) 오후 6시,  
KBS본관 민주광장 집결 후 MBC로 이동



최시중과 공영방송 파괴 5적



# '안전관리팀 팀원 비리' 감사, 결국 재조사로 '감사결과뒤집기 의혹' 현실화되나?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이하 새노조)는 지난해 12월 29일자 노보특보에서 안전관리팀 모팀원에 대한 비리감사결과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고 '특보사장'의 비리척결의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후 코비스 게시판은 뜨거웠다. '엄정철지부장'은 하소연의 대상이 되었고 새노조는 안전관리팀을 매도하는 원흉이 되었다. 특보내용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는 게시물이 넘쳐났고, 법적조치까지 거론되었다. 당장이라도 사단이 날 기세였지만 어느 순간 게시판은 평온을 되찾았고 비리감사결과에 대한 어떤 언급도 사라졌다. 이런 일이 있거나 싶을 정도로 조용했다.

그러던 지난 2월 9일, <주간동아>는 표지에 "단·독·보·도·KBS 안전관리팀 경비단 동영상 조작·금품상납·인사비리의혹"이라는 기사제목을 달았다. 명색이 조 중 동 중 하나의 주간지에 표지기사로 안전관리팀의 조직적인 비리감사결과가 나간 것이다. 내용은 충격적이다. 화염병 동영상 조작에서 조직적인 상납과 허위 시간외실비 수령과 채용비리까지 특보의 내용에 섬세한 디테일을 살려놓은 기사였다. 특보에 대한 격렬한 반응을 고려할 때 이 기사를 쓴 기자는 실물이 훼손될 수 있었고 <주간동아>는 적어도 수십억짜리 소송에다 사무실 점거농성

은 겪어야 할 내용의 기사였다. 이 기사를 본 많은 사람들은 대중매체에 공론화될 정도의 비리 문제가 왜 빨리 처리되지 않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고 '특보사장의 비리 감싸기 여부'가 공론화되었다.

이번에도 KBS 사측은 조용했다. 이상한 조용함 속에 사측이 감사결과를 흔들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는 말이 흘러나왔고 그 배경에 대한 무수한 의혹의 말들이 떠돌았다. 결국 감사결과 흔들기는 사실로 드러났다. 모의원이 안전관리팀 모팀원의 비리감사 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자 '재조사 중인 사건이라 자료를 줄 수 없다'고 답변 한 것이다. 왜 재조사가 결정되었을까? '정치적 이주'를 당한 감사실 직원들은 감사에 최선을 다했고 감사실의 조사는 한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 '검찰조사'를 의뢰하도록 결론을 내렸다. 매우 단순한 사안이다. 정치적 판단이 섞이지 않았다면 말이다. '특보사장의 비리감싸기', '비리감사의 입김



주간동아 기사 (2010.2.10) 'KBS 경비단 기가 막혀'

설 '六人會의 비호설', '정치권 개입설' 등등 재조사 결정을 두고 수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다. "감사실은 정치적 판단을 하는 곳이 아니다"라는 한 선배의 말이 울림을 주는 대목이다.

## 순환전보 개정안, 전면 백지화하라

- 새노조 탄압을 위해 라디오PD들을 희생양 삼지 말라 -

최근 사측이 추진하고 있는 직종별 순환전보 기준 개정 작업이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그동안 지역순환 대상 직종이 아니었던 라디오PD들을 대상에 포함하면서, 당사자들과 아무런 사전 상의 없이 사측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도대체 사측이 왜 갑자기, 이 시점에 이런 순환전보 개정을 밀어붙이려 하는 것인지, 우려를 넘어 사측의 불순한 의도를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사측은 이번 개정안을 만들면서 라디오본부 소속 PD와 관련해 '본사내 타부서 근무를 지역근무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고 '입사후 3년 이상 경과자를 지역순환근무 대상자로 한다'고 기준을 정했다. 타본부 구성원에 비해 차별적일뿐 아니라 해당 직종의 업무 특성을 무시한 전형적인 주먹구구식 발상이다.

비록 사측이 '지역 라디오 활성화'라는 미명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번에 내놓은 순환 전보 개정으로 지역 라디오가 활성화되리라 믿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 구체적인 지역 라디오 활성화 플랜도 없이 떨렁 본사에서 사람 몇 명 보낸다고 '지역 라디오 활성화'라는 중요한 과제가 해결되지도 않을뿐더러 현재 우리의 지역 라디오 제작 시스템이 본사의 라디오PD가 없으면 안 되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이다. 언론노조 KBS본부의 지역 조합원들조차 이번 라디오PD의 지역순환전보 개정안이 '지역 라디오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게다가 본사 라디오PD들은 본사에 있는 7개의 라디오 채널의 순환근무와 의무사항인 라디오MD 근무만으로도 10년 가까운 세월을 보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라디오PD의 지역순환전보는 다분히 그 목적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사측이 이런 현황을 모르고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더욱 우려와 의구심을 갖게 된다. 이번 순환 전보 개정안이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즉 KBS 새노조의 활동을 탄압하기 위해 불순한 책동으로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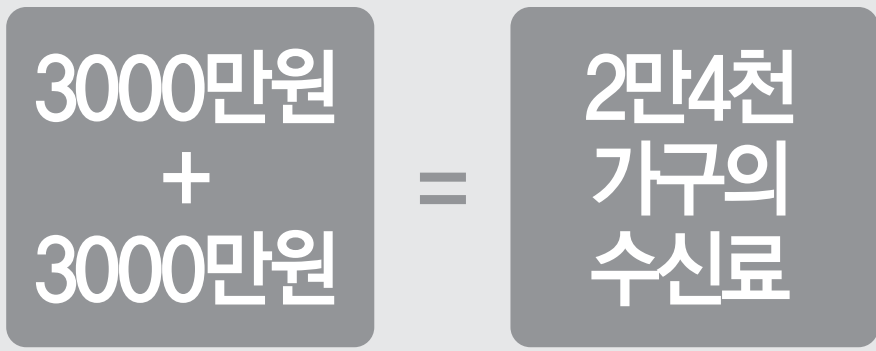
주지하다시피 라디오 PD의 절대 다수가 새노조에 가입했다. 새노조 활동에 열성적인 라디오 PD들을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놓아 새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이른바 '노동탄압의 술책'으로 순환 전보 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이 아닌가.

그게 아니라면 사측은 지금 당장 순환전보 개정안을 전면 백지화하고 라디오PD들과 함께 원점에서 재논의하라. 라디오 PD들은 성명에서 밝혔듯이 결코 지역에 가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합리적인 기준 아래 논의가 진지하게 이뤄진다면 지원해서라도 지역에 갈 수 있다는 것이 라디오 PD들의 뜻이다.

우리는 라디오본부장 등 간부들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정상적 의견 수렴 절차도 밟지 않고 '라디오본부 의견 반영'이라고 허위로 개정안을 작성한 간부들은 더 이상 자격이 없다. 끝까지 불순한 개정안을 밀어붙이겠다는 온전치 지리보전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언론노조 KBS 본부는 라디오 PD를 겨냥한 불순한 순환전보 개정안을 백지화하기 위해 행동에 들어갈 것을 천명한다. 새노조 탄압의 정점에 있는 김인규 특보사장을 상대로 행동에 돌입할 것이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새노조 탄압에 맞서 싸울 것이다.

2010년 2월 2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이건 뭘 숫자? 오로지 투쟁의 한길을 외칠 것만 같은 새노조 특보에 웬 돈놀음일까. 이 돈은 바로 새노조가 남부지법에 신청한 교섭응낙 가처분에 대항하기 위해 KBS가 국내 2위 변호사집단인 법무법인 태평양과 계약한 금액이다. 일단 사건담당 비용 3천에 성공보수 3천 합이 6천.

새노조의 교섭권을 없애는 것도 아니고 가처분을 기각시키는데 드는 비용만 6천. 벌금 1000억도 가뿐하게 납부하시는 회장님도 계시고 4대강 흙탕물 만들기에 수십 조원을 쏟아 붓는 세상이지만 6천만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다. KBS식으로 따져보면 목숨 걸고 올린다는 수신료를 2만 4천가구의 주인께서 완납해주셔야 가능한 일이다. 여기에 한전 못 떼어주고 비용처리 고려하시면 웬만한 중소도시 한 달 수신료쯤은 되지 싶다. 이 돈을 이제 걸음마 겨우 떼 새 노조와의 교섭회피를 위해 아낌없이 지불했다.

참고로 근래 최대 규모의 소송이었던 200억대의 참드원 소송에서도 변호인에게 이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KBS 사상 최대 규모의 변호사 수임료가 될 수도 있는 이번 가처분청구에 사측이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가 말해주는 대목이다. 새노조의 위상과 파괴력을 액수가 말해주고 있다. 사측이 처음 접근한 법무법인에서는 1000만원대의 수임료를 제시하면서 사측의 승소여부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그 후 사측은 드라마틱한 수임료 인상과 함께 <태평양>에 사건을 맡겼다고 한다. 이제 가처분신청의 결과가 나오면 다시 본안소송으로 이어질 것이고 수많은 시청자들이 납부하신 수신료가 소송을 위해 쓰여 질 것이다.